



퍼시픽 포럼 CSIS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 확장억지를 향한 3자협력 구축

1 차 한미일 확장억지 3자 대화

아산정책연구원 서울, 한국
2013년 9월 2-3일

리포트 작성: 데이비드 산토로, 브래드 글로서맨

Issues & Insights
Vol. 13-No. 14

아산정책연구원

2008년에 설립한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 통일에 유용한 국내, 지역,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관련 연구를 지향하는 독립적, 초당파적 싱크탱크이다.

미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CSIS)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www.pacforum.org) 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문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 연구소이다. 퍼시픽 포럼은 현존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정치, 안보, 경제, 경영 및 해상 정책 관련 현안들을 전문가 분석, 그리고 지역 학계,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1975 년에 설립된 퍼시픽 포럼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적 시각에 입각하여 문제를 분석하며, 여러 프로젝트 결과와 권고 사항들을 지역 오피니언 리더, 정부 관계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목차 페이지

감사의 말.....	iv
주요 내용	v
회의록	1
부록	
부록 A: 회의 의제 및 일정	A-1
부록 B: 참가자 명단.....	B-1

감사의 말

본 출판물은 NAVSUP 샌디에고 군수 지원 센터의 지원기금/동의서 번호 N00244-13-1-0023 를 통해 미 해군 고등대학원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개념 및 선진시스템 연구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발언자, 회의진행자 및 발표자들의 의견들은 꼭 미 해군고등대학원의 공식 정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명, 상업관행 및 조직에 대한 언급이 곧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

한미일 확장억지 3자 대화

퍼시픽포럼 CSIS와 아산정책 연구원은 미 해군 고등대학원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개념 및 선진시스템 연구 프로젝트와 미 국방위협감소국의 지원으로 2013년 9월 2-3일 양일 간 한국 서울에서 한미일 확장억지 3자 회의를 개최했다. 35명의 한미일 관련 전문가 및 관료들과 역시 3개국에서 소집한 15명의 퍼시픽포럼 영리더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 토론내용으로:

확장억지 및 재확신에 대하여 변화하는 지역 안보환경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되면서 북한이 몇몇 한국 참석자들은 남북한 충돌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길 꺼려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북한이 향상된 핵전력 때문에 재래식 전력 수준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자만할 경우에 대해 걱정했다. 중국의 핵전력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영토 및 해양 분쟁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정책과 더불어) 또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은 확장억지와 재확신 임무에 관하여 미 핵무기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일부 한국 참석자들은 핵무기 숫자 및 역할을 감소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국 참석자들은 탄도 미사일 방어 및 억지 목적을 위한 재래식 타격 방안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며, 이런 점을 강조하면 오히려 확장억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참석자들은 확장억지의 재래식 구성요소와 핵전력 요소는 상호 강화할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은 미국의 핵 독트린이 더욱 명확하길 원했다. 만약 핵무기가 ‘극단적인 상황’에만 사용된다면 어떤 경우가 극단적 상황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확장억지 적용대상에 못 미치는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조기 포착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동맹기여를 위해 그리고 자신만의 억지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일본은 공중 타격 능력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자신들의 조치를 긍정적인 것으로 상대방의 조치를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공세적타격 방안의 추구에 관하여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지만 일본 참석자들은 그러한 능력은 오직 보복조치의 경우에만 사용될 뿐 선제공격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확장억지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 볼 수 업고 오히려 북한이 자신의 도발능력에 과감해졌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상징한다. 일본 참석자들은 공세적 타격에 대한 정확한 영어 번역은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 참석자들은 일본의 공세적 무기 획득에 대하여 걱정을 표하며 한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에 대한 타격은 한국에 대한 타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률적 소설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공격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을 둘러싼 민감성 정도를 보여준다. 일본 참석자들은 한국의 미사일지침 개정의 동기를 이해하지만 이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참석자들은 한미 동맹 간 특히 전시 작전권 이양에 관하여 더욱 투명성을 요구했으며 어떤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 과정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요구했다. 미일 동맹 및 유엔사령부 후방은 한반도 방어에 중요한 요소이며 일본은 한미 동맹의 발전현황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시리아 사태는 미국 신뢰도의 테스트로 언급되었다. “확실히 (처벌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레드 라인을 그어선 안된다.”그럴 경우 동맹국 및 적대국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도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동맹국과 적대국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공습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받는데 겪는 어려움은 동북아 역내 우발상황 발생시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우려하게 만든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 미국의 신뢰도 및 안보공약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지 왜 그러한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미국의 신뢰도 및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의 테스트로 보는 경향을 자중해야 한다. 무엇이 어떤 문제를 다른 것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지 식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식별하기를 가장 꺼려했지만 대부분 중국의 국력 성장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사일 방어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몇몇 외교정책 결정은 중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본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센카쿠/다오위다오 섬을 둘러싼 긴장감을 고려할 때 잠재적 중국 위협에 관하여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상호 (핵) 취약성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이는 중국의 역대 공세적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만들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한미일 참석자들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의 형태로서 3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대중정치가 정책을 조성하며 그런 협력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협력과정이 최고지도부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모두 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선 최고지도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엔 동의했지만 실무수준에서의 성사를 선전할 것인지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전반적인 한일관계간 긴장감은 양자 간 국방협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그런 협력이 양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보이는 경우에도 그렇다.

한국 참석자들은 한반도 미 전술핵무기 재반입 및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개발에 대한 토론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통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러한 모험적 토론이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참석자들은 한반도 미 전술핵무기 재반입 및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개발은 핵무기 역할을 감소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상충하며 북한의 핵정책을 저지하기 보단 오히려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며 북한의 장거리 핵능력 개발시 미국의 정책변화는 미국의 신뢰도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 수준 유지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은 전투태세가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노력은 러시아의 전략적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마-러 간 유럽에서의 전술적 핵무기 감소를 둘러싼 협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지역에서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한국, 일본 참석자들은 모두 확장억지 및 재확신 정책에 대한 3 자간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본 회의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했다. 특히 일본측 참석자들은 본 회의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장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올바른 사람들이 참가한 경우 이러한 과정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 도상훈련은 트랙 2 및 트랙 1 대화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북아 확장억지를 향한 3자협력 구축

리포트 작성: 데이비드 산토로, 브래드 글로서맨

북한의 빠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꾸준한 군사 현대화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에 새로운 안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지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미국은 군 준비태세 및 관련 정책을 조정하면서 동맹국들과의 확장억지 관계를 강화하였고, 한미 확장억지 정책 위원회 및 미일 확장억지 대화와 같은 양자간 협의체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해결방안을 제공해왔다. 성과가 없진 않았지만 두 동맹관계 내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동시에, 적어도 미국의 관점에서, 확장억지에 관한 협력 및 신뢰가 3자 수준에서 강화될 때 역내 안정성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확장억지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리고 3국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퍼시픽포럼 CSIS 와 아산정책 연구원은 미 해군 고등대학원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개념 및 선진시스템 연구 프로젝트와 미 국방위협감소국의 지원으로 2013년 9월 2-3일 양일간 한국 서울에서 한미일 확장억지 3자 회의를 개최했다. 35명의 한미일 관련 전문가 및 관료들과 역시 3개국에서 소집한 15명의 퍼시픽포럼 영리더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확장억지 및 보장, 중국과 아시아 내 세력균형, 북한문제, 한미일 3개국의 국방정책의 변화 등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확장억지와 신뢰성 제고에 관한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살펴보았다.

전략적 관점과 확장억지

한국측 발표자는 북한이 핵개발과 군사도발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한 우리도 늘 하던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중국이 야기하는 위기상황의 영향을 우려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아직 서울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은 서울의 주요 우려로 남아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며 핵탄두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측 발표자는 미국 본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과연 미국이 안보공약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비동조화(de-coupling)”의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설령 미국 행정부가 안보공약을 실천할 의사가 있다더라도 미국 의회가 그런 조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우려사항으로 북한이 핵탄두가 암호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재래식 무기 또는 사이버 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축 관련어휘로 안정-불안정 역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로 요약할 수 있다.

한측 발표자는 처벌을 통한 억지 전략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왜 상대방이 공격해올 것을 알면서도 당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탐색능력을 통해 억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적절하다. 그는 또한 대북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 국가안보 정책 상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 감소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억지력 향상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지만 기술적 실행 가능성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한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및 전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중하게 지지하는 편”이며, 일본과의 어떤 형태로의 협력에 대한 감정적인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한 일본과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일본측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2010 년 국방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말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비슷한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겐 중국과 센카쿠 섬을 둘러싼 돌발사태가 되었든 북한이 되었든 확장억지의 적용 대상에 모자란

안보위협상 “회색지대”가 주요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측 발표자는 한측 발표자와 동의하며 조기 (위협)포착을 통한 억지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동적 억지력” 독트린이 2010 년에 도입되었을 때 일본의 주요 우려사항은 동중국해상 중국의 ‘은밀한 확장주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정보-감사-수색 (ISR)능력을 개발하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ISR 능력만으로 중국과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물리적 억지력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졌으며 조기포착을 통한 억지력은 반드시 처벌을 통한 억지력이 보조해야 할 것이다.

일측 발표자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예산의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주의깊게 낙관적”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차후 10-20 년간 적절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만, F-35 도입 지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시리아를 대상으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시리아를 공습할 지 여부에 대하여 길고 소용돌이치는 논쟁은 일본과 다른 미국의 동맹들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측 발표자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 더욱 명확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일정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는 분쟁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본의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상호 핵공격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핵무기 덕분에 재래식 무기 수준에서 더욱 공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시 안정-불안정 역설의 상황을 조성하면서)

미국측 참가자는 현재 2 년째 접어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미국의 경제와 미래가 아시아 지역과 떼어놓을 수 없이 연계되어있다는 인식에 기반해있다고 강조했다. 재균형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워싱턴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방위공약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건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패권국이 부상하거나, 자국 및 동맹국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력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자유무역과 항해권을 보호하면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합양을 지지할 것이다.

북한 또는 중국과의 우발상황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큰 도전이 예상되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측 발표자는 워싱턴의 관점에서 북한에 관한 한 억지력과 확장억지력 개념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갈라놓는 (de-couple)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국은 냉전시기 동안 소련이 북한보다 훨씬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저버린 적이 없었던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상호 핵취약성을 인정할 의도가 없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일 지 몰라도 또한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취약성”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국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한미일 3 자 협력 강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3 자협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긴박감이 부족하다.

미측 발표자는 확장억지력이 긴장고조의 모든 수준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나처럼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적대국과 동맹국 양측 모두 필요이상으로 대담해지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건하에서 대응할 것인지 모호하게 남아있기를 선호한다. 게다가 핵무기만이 확장억지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또한 억지력 분담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재래식 군사력은 동맹국과 협조를 통해 활용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비동조화(de-coupling)’현상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차후 문제를 검토할 때 확장억지정책을 핵무기와 재래식무기 및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구분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미국의 단계적 접근은 (북한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토론 중 참석자들은 시리아 논쟁에 집중했다. 한국과 일본측 모두 시리아 논쟁에 미국의 신뢰도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몇몇 참석자들은 “확실히 (처벌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레드 라인을 그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동맹국과 적대국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공습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받는데 겪는 어려움은 동북아 역내 우발상황 발생시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우려하게 만든다. 미측 참석자들은 시리아 논쟁엔 미국 신뢰도보다 더 많은 것들이 걸려있으며, 다마스커스를 신뢰도 유지의 이유만으로 공습하는 것은 실수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미국의 신뢰도 및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의 테스트로 보는 경향을 자중하도록 촉구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도전이 정말로 미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몇몇 참석자들은 잠재적 적대국의 능력 향상 이후 미국정책의 변화가 미국 신뢰도에 심각한 저해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측 참석자들은 이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한 일본 참석자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오늘의 정책이라면 조만간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재균형을 추구할 지도 모를 일이며 이것은 신뢰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센카쿠섬을 둘러싼 상황이 미국과 미일 동맹에 관한 신뢰도 테스트라고 주장했다. 이 점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이 부상할 경우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재정 악화가 해외파병이 아닌 방위 대비태세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의 토론에 비해 결정적으로 다른 점으로,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은 미국의 방위 준비태세를 단순한 ‘숫자’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듯했다.) 미국 참석자들은 재정 압박이 방위태세에 관한 상징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응답했다. 미국의 군사능력은 여전히 세계최강으로 남아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세를 점하기에 충분함 이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어진 전술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에 대한 한국의 요청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은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평화를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 덕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럽의 평화는 전술적 핵무기가 아닌 미국의 재래식 전력의 전방 배치 덕분으로 유지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미일 3국이 미군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더욱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한 일본측 참석자의 권고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의 집단안보상 자위권역할 개선 시도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측 참석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여진 반면 한국 참석자들은 일본이 “과거문제를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섞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는 공세적 재래식 타격능력 개발에 대한 일본 내 논쟁에 대한 검토로 이어졌다. 일본측 참석자들은 이 문제는 “(회의 안건으로) 테이블 위에 이제 막 올라갔을 뿐”이며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진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의 증진에 따라 대응적으로 논쟁이 붙어진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일본 참석자들은 일본의 이러한 타격능력은 보복조치가 필요시 사용될 뿐이며 자국 본토에 대한 첫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체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내 세력균형에 대한 의견들

미국측 참석자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과거 행정부로부터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관여하면서 베이징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적극성이 원칙이며, 이에 일관되게 미국의 정책은 이란과 같은 잠재적 적대국에게 “손을 내밀고” 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양자 수준과 다자적 기구의 수준 모두에서 활용된다.

재균형 정책은 이러한 접근방식의 중심이다. 이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중심축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몇달 동안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금 논의의 초점은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에 맞춰져 있다.

미측 발표자는 미국과 동맹국들 내에서 중국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 (anti-access, anti-denial capabilities) 개발은 특히 우려스러우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공해전 (AirSea Battle)”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집중적인 논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 또한 냉전시기의 비동조화(de-coupling) 압박과 안정성-불안정성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와 같은 문제들과 여전히 비슷하다. 오늘 미국에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동맹국들을 안심시켜 프랑스의 1960년대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는 중국의 부상의 역내 세력균형에 대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 선언 이후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완고하고 공세적인 정책은 안보환경을 바꾸고 있으며, 중미관계 또한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부분 이 지역의 국가들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측 발표자는 중국의 군사현대화 노력이 아시아 내 세력균형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관심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측 참석자는 만약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군사현대화 노력을 자극하면서 동북아 내 무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측 발표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노력을 평가했다. 인민해방군은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하고 제 4 세대 전투기 및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핵탄두 및 재래식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 2 포병부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전함 탄도미사일(DF-21D), 중거리 탄도미사일(DF-21) 및 전술적 크루즈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우주정보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개의 네비게이션 위성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긴장고조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일측 발표자는 ISR 기술만으론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일본은 “회색 지대” 상황 및 소-중규모 군사충돌 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공해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반접근/지역거부 (anti-access, area-denial capabilities)의 안보환경 하에 높은 수준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장억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투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전역 군사력 투사가 중요하며 미군의 전방배치가 동북아 지역 내 확장억지의 중요한 요소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일측 참석자는 또한 무기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이 공해전 개념의 추구가 중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선사용 금지 정책 (no first-use policy)을 철회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그는 최근 중국의 국방백서에 핵무기 선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해 걱정했다.

토론은 동북아 내에서 3자간 대화의 가치에 초점을 두며 시작했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중국이 한미일 3자협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미중 3자 대화를 설치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들이 3자 회담은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문제를 토론할 효과적인 기제가 부재한 상황 하에 (6자 회담은 2009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3자 회담은 위기관리 및 북한의 우발상황 발생시 대응계획을 토론하기에 유용하다. 한미중 대화는 북한을 염두해두고 설치됐다. 한미일 3자 회담도 북한에 초점을 두지만 더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취약한 한일 국방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일 3자 회담간 중국을 토론하는 것은 각국이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상이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한국 참석자들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가장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점차 강화되는 국력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일부 외교정책 결정 (미사일 방어에 관련한 것들을 포함하여) 중국의 압력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 참석자들은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크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기정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토론은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 역내 세력균형에 대한 합의 등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토론의 핵심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엔 3가지 상호연계되어있는 질문이 있다. 첫째,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시진핑 정권의 주의력을 흡수하게 될 국내문제에 대한 우려때문인가? 아니면 국내정치 압력 때문에 시진핑 정권이 외부세력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줄 수 없는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중국의 능력에 대한 위협평가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중국의 군사능력 및 군사현대화 계획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 중국을 국제체계의 네트워크 내에 깊이 통합시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관점들

한측 발표자는 박근혜 정부가 건강한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한 억지력”에 기반한 신뢰 프로세스를 실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규칙 만들기보단 “규칙 시행”에 더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규칙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히 긍정적인 편이다. 북한과 “도발-관여-도발”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패턴을 고려할 때, 매우 조심스런 접근만이 실행가능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게서 전술적 변동이 아닌 전략적 변화를 보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다루는 것은 다차원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며 그중 하나는 핵무기다. 다른 문제로는 인권, 핵확산, 밀수입, 화폐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 한국에게 평양으로 가는 길은 베이징을 거쳐가며 한중미 접근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동시에, 북한 관련 우발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일본측 발표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특히 북한 헌법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지정하도록 수정된 마당에 더욱 그렇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몇년 동안 작동해왔지만 (1953년 이후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없어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측 발표자는 미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북한에 관하여 효과적인 억지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만약 억지가 실패할 경우 일본의 유일한 대응은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 뿐이다. 일본은 ISR 능력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미일 연합 훈련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위축된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그런 훈련의 언론보도가 중요하다.

미측 발표자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성과를 낼 것이란 생각을 평가절하했다. 6개 국가는 “분열된 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석국들 사이에 전략적 이익의 조정이 부재한다. 미국은 북한을 한국과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또한 핵위협, 확산위협, 신뢰도의 위협문제로 본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군사도발을 방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동맹국들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관련 이익과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는 국가지도자들, 정책입안자, 대중 등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을 고려할 때 실천하기는 말하기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미측 참석자는 미국이 포괄적인 방어전략을 개발 중이며 이는 북한 위협을 억지,포착, 방어, 방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파괴하기 위한 정치적-금전적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길 기대하며 만약 대북한 억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연합 훈련을 환영한다. 요약하면, 미국은 북한 우발상황에 대하여 동맹국의 조화로운 대응을 기대하며 북한을 다루기 위한 활발하고 협조된 외교를 기대한다.

토론 세션 중 한국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북한 접근방식은 신뢰 프로세스 개발과 강력한 억지력 발휘의 두 개 노선이 있음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햇볕정책으로의 회기를 의미하진 않는다. 한측 참석자들은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를 한반도로 재반입하는 조치는 나름의 비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또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만약 북한이 군사능력을 계속 확장할 시 우리 역시 무언가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본측 참석자들은 나름대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일본에게 가장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쉽게 포착할 수 없는 노동 미사일이다. 일본의 방위성은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살려두려는 한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간 관계를 점차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번영을 동시에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참석자들은 북한에 관하여 억지력 부담을 분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동맹국들의 능력이 적절히 통합되어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참석자들은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비생산적인 조치임을 재확인했다.) 정책수준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국이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시지들이 조정되어 외부로 표현되기 전에 조정하며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 태세 및 국방개혁 중 변화

일본측 발표자는 자민당 복귀와 내각이 더 이상 “(각기 다른 정당이 상하원을 따로 통제할 경우와 달리) 꼬여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적어도 2016 년까지 일본 정치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로써 일본 지도부는 과거에 견제받지 않을 수 없었던 외교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2013 년말 집권 후 아베 수상은 20 개 국가를 방문했으며 미일 동맹을 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징검다리로서 활용했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나름의 “우호적인 전략적 균형자” 및 “우호적인 관계 균형” 정책을 추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위치를 최적화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은 자신의 외교정책 계획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무대에 표방하는데 나름 신중한 편이었다.

일본은 12 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개선하고 안보지침을 제공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할 것이다. 이는 일본 외교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헌법 제 9 조의 제한을 고려할 때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측 발표자는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를 시행할 지에 대해선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지만 법 개정의 주요목표는 일본의 자국 (군사)능력 증강이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중요하며 미일 동맹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해양안보 문제 및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일본 지도부는 점점 중국을 겨냥한 “집단 균형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외부로 선전되기 전에 더욱 세밀하게 정의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측 발표자는 이 정책이 미국의 자원을 분배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의미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의 시행이 아직 아시아 지역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는 분명 미국의 정책 기획을 조성하고 있다.

미측 발표자는 양자, 3 자, 4 자 수준에서 동맹국들 간 조정,협력,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재균형 정책에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은 연합훈련을 통한 작전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공해전 개념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 및 관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핵무기를 자국 안보 및 확장억지에 중요한 요소로 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억지전략이 어떻게 확장억지의 핵무기 외 요소들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측 발표자는 한국의 2012 년 방위태세의 골자 및 최근 미국과 협력하여 시행한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탄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안보환경에 맞춤형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술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방안에 반대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재반입에 대한 토론 자체가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무언가 더 노력해야한다는 반증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공격적 타격능력 개발은 비슷한 도전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국정부는 이러한 타격능력 개발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이해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일본의 의도가 핵심요소다. 한국은 일본이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계획을 제공하길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측 발표자는 여전히 현재 안보환경은 더욱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토론 중에 한국 참석자들은 미사일지침 개정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측 참석자들은 한국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탄도 미사일개발이 최선의 대응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측 발표자는 이에 대해 이미 전개된 크루즈 미사일은 북한 동굴이나 은닉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지만 산너머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선 탄도 미사일이 중요하다. 일본측 참석자는 또한

미사일지침 개정은 일본에 관하여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한미 동맹의 투명성에 관한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불만이라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관점에서 몹시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전작권 이전 작업에 대한 일본측 언급에서 명확히 표현되었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걸려있는 제한사항을 줄이려는 일본의 노력에 대하여 매우 비슷한 정도의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일본의 타격 능력 획득에 초점을 두어 한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에 대한 타격은 한국에 대한 타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률적 소설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공격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을 둘러싼 민감성 정도를 보여준다. 이 두 사례는 미국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각국은 자신의 조치가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상대국의 조치는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하다.

신뢰성 제고와 확장억지

미국측 발표자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threat)과 동맹국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안보지원) 보장(credible reassurance) 덕분에 동북아 지역에서 확장억지는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고 지적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안보보장은 외교, 정부 성명, 공식적인 조약을 통한 보장, 지역 내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 군사 투사력, 연합훈련 및 다른 형태의 방어협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뤄졌다. 또한 재균형 (그리고 억지) 정책의 중심엔 미국의 전략적 핵억지가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확장억지력을 논할 때 중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서로 매우 다른 토론거리가 있다. 중국에 관해선 미측 발표자는 미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보기보단 경쟁자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을 적국으로 보는 일본의 관점과 대조된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식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중요하게 우려하는 점이 없다고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재래식, 핵전력 현대화, 투명성 부족 및 반접근/지역거부 능력 개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도전, 베이징의 확산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 문제에 대하여 걱정한다. 미국은 지역 내 동맹국들이 안심하는 동시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걸어야만 한다.

센카쿠 섬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에 관하여 미측 발표자는 미국의 정책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미국은 섬의 소유권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모든 영토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일본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영토(센카쿠 섬을 포함)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일 안보조약 제 5 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상황에 말려들어가길 원치 않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영토 분쟁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영토방어를 지원하겠지만 동시에 중일 간 평화적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미측 발표자는 1953 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규모 공세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낮은 수준에서의 군사도발과 충돌에 대해선 확장억지력이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잠잠해지긴 했지만 올해 봄 북한의 연속된 도발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개발에 따라 더욱 대담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며 새로운 사이클의 도발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많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확장억지의 작동조건에 대하여,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한미일 간 협력이 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임계철선 밑에서” 또는 “회색 지대” 공격에 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토론하며 누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미국? 동맹국 자신들? 공동으로? 어떤 능력을 활용하여? (일본 내 재래식 타격 무기에 관한 논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중국과 북한의 포격능력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장억지력에 갖는 함의에 대한 것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무기경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가? 미측 발표자는 한국의 미국 전술적 핵무기 재반입 요청을 부정하며 미국은 미 본토로부터 원거리 상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불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상 핵무기의 역할과 숫자를 줄이려는 더욱 광범위한 목표에 배치되기도 하다. 오히려 이런 방안은 북한의 핵탄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핵능력 조정이 확장억지력에 갖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시점에 핵우산이 신뢰하기에 너무 “얇아지는가?”

일본측 발표자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과 상호취약성을 인정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미 간 상호취약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불균형하단 점을 인정한다. 일본의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명확한 우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상호취약성을 인정할 때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일은 무척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미국이 기존의 전략을 바꾸지 않도록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일측 참석자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재래식 전력의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미일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는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며 미국은 북한에게 적절히 대응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뢰도에 관한 일본의 인식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중국과 우발상황 발생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본인들이 예측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측 발표자는 이러한 일본의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간 더욱 가시적인 억지태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B52 전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다. 일본도 새로운 국방프로그램지침, 집단 자위권 한계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 그리고 공세적 타격능력 개발의 가능성 등 조치가 보여준 것처럼 동일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는 공세적 타격능력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이는 일본의 안보를 향상하고 북한이 핵탄두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할 경우 이를 억누를 확장억지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는 성공적인 억지력은 성공적인 안보보장과 꼭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을 억지할 지 모르지만 동시에 한국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성공적인 안전보장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저항할 수 있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삼가하길 요구한다.

오늘날 전략환경은 냉전시기와 다르다. 억지력이 냉전시기동안 작동했지만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장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억지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위한 재확신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핵무기 숫자 및 역할 감소의 정책에 관하여 한국이 미국의 안보지원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며 미국이 국방예산을 상당히 축소함에 따라 더욱 그렇다.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 재반입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추가로 발휘할 것 같진 않지만, 한국을 위한 심리적 효과가 간과되어선 안될 것이다.

토론 시간동안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은 확장억지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 핵무기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몇몇 한측 참석자들은 국방정책상 핵무기 역할과 숫자를 감소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 한국 참석자는 미국이 핵억지력보다 재래식 억지력의 이점을 강조할 경우 이는 확장억지력과 신뢰성 제고 모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참석자들은 확장억지력의 재래식 및 핵무기 요소는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강화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더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 모두 확장억지와 재확신 문제가 전반적인 미국과의 관계와 떼어놓을 수 없이 연계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확장억지와 신뢰성 제고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조화롭게 일치되어있고, 그렇다고 느낄 경우에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한 한측 참석자는 “미국에게 있어 우리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더욱 가시적인 형태의 확장억지력과 신뢰성 제고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주제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2013 년 B2/52 전개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어떻게 확장억지와 신뢰성 제고가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더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

확장억지력을 증강시킬 3자 관계의 기회

한국측 발표자는 한국과 일본이 확장억지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개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 미국의 안보정책상 핵무기 숫자와 역할을 줄이겠다는 공약과 중국(중국 위협에 대한 한일간 인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을 비난한다. 공통된 우려사항은 동맹국 3자간 많은 잠재적 협력의 영역을 제공한다. 한미일 3국은 인근 공해상에서 정기적으로 미국 항공모함 및 잠수함이 참가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 및 일본 섬 위로 출동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국 항공기가 북한 우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훈련에 순환식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한미일 3국간 C4ISR 능력향상을 위해 호환성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국 3국은 미국과 일본이 해온 것처럼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측 발표자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길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3국간 더욱 조직적인 또는 제도화된 회의체가 설립되어 더욱 잘 계획하고, 상담하고, 연습하고 확장억지 관련 문제에 제대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적 핵무기를 재반입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도 있다.

협력은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예산제한에 직면해있다. 작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비준이 실패한 사례가 보여주듯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 또한 또 다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신조 아베 총리의 최근 역사 및 영토 관련 발언이 한국 내 불신을 더욱 심화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베 내각이 일본군의 역할과 임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한일간 양자 협력의 어려움을 증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든 협력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한국은 우려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의 발전은 특히 중국에게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는 한일 협력없이 지역 내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군의 공동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발상황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가 됐든, 정보교류, 군사 연습, 비확산, 해적 대응문제든 평화시에도 협력이 필요하다. 양자협력 개선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는 중국을 적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측 발표자는 미국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변환을 유도하고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한미일 3 자 파트너십을 운용하고 제도화하는데 관심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 국의 이익이 가장 긴밀하게 교차하는 지점으로써 북한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개발로 압박을 가하고 관련 도전들이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미측 발표자는 3 자 회담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 발표자는 다른 발표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정치적 문제들, 실무수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부재와 같은 문제들, 부족한 자원등과 같은 장애요소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3 개국이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 방어, 비확산, 해양안보와 같은 영역에서 참관자 교환만할 게 아니라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긴축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호크와 같은 ISR 자산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역시 민감한 정보보호를 위한 양자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없이 진행할 수 없다. 게다가 최고 지도부 간 교류가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확장억지 및 재확신 문제에 대한 정책성명이 조정되어야 한다.

미측 발표자는 미국이 절대 해선은 안될 부분에 대하여 언급했다. 한일 양자간 정치적 분쟁에 말려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미국 지도부는 동시에 어떤 동북아 지역 동맹국도 정책안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일 양국 중 한쪽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한일간 미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3 자간

협력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적대화하지 않는 선까지 3 자간 협력을 밀어붙일 것이다.

토론 시간 중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공동체는 더욱 깊이있는 조정과 협력으로부터 이득을 볼 것이라고 동의했다. 대중정치가 정책을 조성하고 그런 협력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참석자들은 양자협력을 위한 노력이 최고 지도부의 관심을 받아야 할 지 아니면 실무수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지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적어도 양자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최고 지도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엔 모두 동의했다. 그렇다면 낮은 수준에서의 성공사례를 강조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질문만 남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간 국방협력 개선의 이점을 널리 알리는 선전활동이 안보집단과 대중여론 사이 인식의 간격을 좁힐 것이라고 건의되었다.

일반적 고찰, 결론, 그리고 향후 조치에 관하여

이번 퍼시픽 포럼이 주관하여 최초로 개최된 한미일 3 자간 확장역지 대화는 확장역지 및 재확신 문제에 대하여 한미일 각국의 입장을 펼쳐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본 행사는 한미일 3 개국이 이 문제들에 대하여 공통의 이익을 이해하고, 구축하고, 개발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회의체를 제공하였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일 관계의 현상태를 고려할 때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 참석자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장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올바르게 선정된 사람들, 올바르게 설정된 회의 의제, 올바르게 진행된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많은 참석자들은 본 대화의 다음 회차에는 트랙 2 와 트랙 1 대화노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도상훈련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회의 전반에 걸쳐 한일 관계상 긴장이 감지되었다. 한일 양국의 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한일 관계는 한미일 3 자간 정책조정및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으로 3 자간 정책 조정을 위한 시도에 비해서 한미간 동맹 및 한일간 동맹 사이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개념화될 경우 한일 양자간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본 대화의 다음 회차 회의에선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를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안보기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은 한 지역에서의 발전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몇몇 참석자들은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노력이 러시아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유럽에서의 미국-러시아 간 전술적 핵무기 감소에 대한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간 확장억지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1987 년 유럽 전구만을 염두해두고 협의된 바가 틀림없는 미국-러시아 간 중거리 핵전력 협약이 극동 지역에 러시아 핵무기 체계의 재전개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일본이 크게 우려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또한 미국 참석자들과 동북아 및 유럽 동맹국 사이 확장억지에 대한 별도의 토론을 (또는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가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 구성의 회의는 미국 동맹국의 확장억지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상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 바람직한 정책 조정과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는 점점 NATO 를 통해 확장억지를 시행하는 “유럽형 모델”을 바라보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참고로써 그리고 동북아형 모델 개발을 위한 매우 유용한 훈련이 될 것이다.

Appendix A

US-ROK-JAPAN EXTENDED DETERRENCE TRILATERAL

September 2-3, 2013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eoul, Korea

Conference Agenda

Monday, September 2

9:00AM Introductions

9:15AM **Session I: Strategic Perspectives and Extended Deterrence**

The three countries compare and contrast perspectives on regional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of US extended deterrence. What distinguishes these threats from other security challenges? What are the important trends 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salience of these threats? What is the role of deterrence by denial and deterrence by punishment for addressing these threats and what role does the US nuclear arsenal play versus other non-nuclear assets like missile defense, conventional forces, etc.? How should we apportion our range of resources to these specific challenges? How should we discuss or frame these challenges to ensure they get the attention they deserve without inflating them or provoking other countries?

Korea Presenter: CHOI Kang, The Asan Institute

Japan Presenter: Sugio TAKAHASHI, MOD

US Presenter: Shane SMITH, NDU

10:45AM Coffee break

11:00AM **Session 2: Views of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in the Asia Pacific**

How does each country see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Is it changing? If so, how and why (i.e, what is driving that shift)? What is the impact of that shift? How does a shift impact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How does each country evaluate PLA military modernization efforts (e.g. nuclear forces, submarines, etc.)?

US Presenter: Eric THOMPSON, CNA

Korea Presenter: KIM Hankwon, The Asan Institute

Japan Presenter: Ken JIMBO, Keio University

12:30PM Lunch

1:45PM **Session 3: Views of North Korea**

How does each country characterize the North Korean threat? What is the role of deterrence? What specific scenarios is each country trying to deter and what are they doing? What does each government expect the other two to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what is expected when deterrence fails? At what level does North Korea become a threat that engages the US extended deterrent and at what point should the US nuclear arsenal come into play?

Korea Presenter: CHEON Seong-Whun, KINU
Japan Presenter: Hiroyasu AKUTSU, NIDS
US Presenter: Kevin SHEPARD, USFK

3:15PM Break

3:30PM **Session 4: Changes in national defense postures and status of reforms**

What is the status of defense postures and programs, especially given the new governments in Tokyo and Seoul? What is each government planning to do? How will those changes impact the extended deterrent? To what degree does the extended deterrent shape Japanese and ROK plans? What is the status of the rebalanc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s plans to try to continue to reduce nuclear weapons on the extended deterrent? How can these policies best be used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Japan Presenter: Ken JIMBO, Keio University
US Presenter: Bryan PORT, USFK
Korea Presenter: CHO Nam Hoon, MND

5:00PM Adjourn

Tuesday, September 3

9:00AM **Session 5: Reassurance and extended deterrence**

How can the US reassure the ROK and Japan regarding the viability and credibility of its extended deterrent? What does each government want Washington to do?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that would be troubling to these governments? What should the US NOT do? Are there nonmilitary ways the US can reassure its allies of the durability of its extended deterrent and its commitment to their defense?

US Presenter: Robert GROMOLL, US State Dept.
Japan Presenter: Sugio TAKAHASHI, NIDS
Korea Presenter: WOO Jung-Yeop, The Asan Institute

10:30AM Coffee break

10:45AM **Session 6: Opportunities for trilateral relations that increase extended deterrence**

What can the three governments do together to shore up extended deterrence in East Asia? When can they cooperate in the region in a meaningful way? Can each government see ways that the other two countries can cooperate to increase extended deterrence? Are there things they should not do?

Korea Presenter: KIM Young-ho, KNDU
Japan Presenter: Takehiro FUNAKOSHI, MOFA
US Presenter: Michael URENA, US State Dept.

12:15PM Lunch

1:30PM **Session 7: Next steps**

What should the three countries do to strengthen regional stability and deterrence? How can this dialogue contribute to that process?

3:00PM Adjourn

Appendix B

US-ROK-JAPAN EXTENDED DETERRENCE TRILATERAL

September 2-3, 2013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eoul, Korea

Participant List

Japan

Dr. Hiroyasu AKUTSU
Senior Fellow, Northeast Asia Division
Regional Studies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Mr. Takehiro FUNAKOSHI
Minister
Head of Political Section Min-
istry of Foreign Affairs Em-
bassy of Japan

Mr. Yoshiyasu ISEKI
Counselor
Embassy of Japan, Korea

Dr. Ken JIMBO As-
sistant Professor Keio
University

Ms. Ayako SHIMIZU
Japan-US Security Treaty Division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in-
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Mr. Sugio TAKAHASHI
Senior Fellow
Policy Studies Department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Col. Masashi YAMAMO
Counselor
Japan Embassy, Korea

Korea

Gen. AHN Kwang-chan (Ret.)
Chair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Dr. CHEON Seong-Whu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r. CHO Nam Hoon
Policy Adviser to the Minist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r. CHOI Kang
Vice Presiden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Dr. KIM Hankwon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Dr. KIM Young-ho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r. LEE Chung M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Dr. LEE Sang Hyun
Director of Security Strategy Studies
The Sejong Institute

Dr. WOO Jung-Yeop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Korea Observers

Ms. Eileen BLOCK
Program Office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Ms. HAN Na-lee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s. JEONG Sangmi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r. KIM Gibum
Program Office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Ms. LEE Sunhee
Program Office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Mr. LEE Sungwon
Program Office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Mr. PARK Jun-Sung
Senior Researche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nstitute

US

Mr. Ralph A. COSSA
President, Pacific Forum CSIS

Ms. Nicole FORRESTER
Director - Young Leaders Program
Pacific Forum CSIS

Mr. Markus V. GARLAUSKAS Direc-
tor of Strategy, US Forces Korea

Mr. Brad GLOSSERMAN
Executive Director, Pacific Forum CSIS

Dr. Robert H. GROMOLL
Director
Office of Regional Affairs (ISN/RA)
US Dept. of State

Mr. Bryan PORT
Deputy Directory & Command Senior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
UNC/CFC/USFK

Dr. David SANTORO
Senior Fellow fo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ffairs
Pacific Forum CSIS

Dr. Kevin A. SHEPARD
Deputy Director for Combined Forces
Command Strategy
UNC/CFC/USFK

Ms. Lori SHOEMAKER
Political Officer, US Embassy Seoul

Dr. Shane SMITH
Research Fellow,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r. Eric V. THOMPSON
Vice President and Director, Strategic
Studies, Center for Naval Analyses

Mr. Michael URENA
Strategic Engagement Division
Office of Strategic Affairs
Bureau of Arms Control, Compliance
and Verification
US Department of State

Mr. Joe YOUNG
Acting Foreign Policy Advisor
US Pacific Command

US Observer

Ms. Priya SETHI
Eighth Army G5 Plans
Booz Allen Hamilton

Mr. Joseph OH (USA)
Operational Net Assessment analyst
United States Forces Korea future
operations plans division

Pacific Forum CSIS Young Leaders

Ms. Sunna AN (KOR)
Graduate Student, Yonsei University

Ms. Aiko SHIMIZU (JPN)
Resident SPF Fellow Pacific
Forum CSIS

Mr. Young-June CHUNG (KOR)
PhD Candidate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Mr. Timothy STAFFORD (GBR)
Associate Fellow, Henry Jackson
Society Georgetown University

Ms. Lisa Dalem COLLINS (USA)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Law and Conflict Reso-
lution Center, Asan Institute for Poli-
cy Studies

Ms. Oknam YI (KOR)
PhD Candidate, Kyung Hee University

Ms. Darcie DRAUDT (USA)
Assistant Editor, Sino-NK

Dr. Ryo HINATA-YAMAGUCHI (JPN)
Adjunct Research Fellow
Pacific Forum CSIS

Mr. Chin-Hao HUANG (THA/TWN)
PhD Candida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r. Akira IGATA (JPN)
Doctoral Student, Keio University

Ms. Stephanie Nayoung KANG (USA)
Resident Kelly Fellow
Pacific Forum CSIS

Ms. ChungAhn (Jung-Ahn) KIM (KOR)
Reporter, *DongA Daily & ChannelA*

Mr. Joseph Boyd LENOX (USA)
Intern, International Crisis Group

Mr. Jonathan MILLER (USA/CAN) Sen-
ior Policy Officer, Asia-Pacific Desk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